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과정

김은설 연구위원

뉴질랜드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유·보 통합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볼 때 뉴질랜드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여전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반면 보육은 취업모가 구매하는 상품으로 여겨 이에 대한 지원을 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보육 지원에 대한 각성과 동시에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질 제고의 해법을 유아교육과의 통합에서 찾아, 사회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일단 교육부 소관으로 이전한 후 교사양성체제 동일화, 공통교육과정 개발, 재정지원 동일화를 성취해내었다.

뉴질랜드는 1986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공식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은 각각 교육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에 더하여 다문화 국가의 특성을 살려 지역 원주민의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마오리 담당부가 별도로 책임을 맡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와 비교할 때 원주민을 흡수 통합하여 백인 중심 국가를 건설한 호주는 달리, 마오리족 원주민과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과 제휴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국가를 건설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어를 인정하고 국회나 주요기관 구성원 중 일정 비율을 원주민에

* 본 원고는 Meade, A. & Podmore, V. N.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no.1을 근거로 하여 집필되었음.

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또한 마오리 담당을 따로 두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교육부와 사회복지부, 그리고 마오리부 등 3개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이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의 20년에 걸친 국가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 시기 동안 부처간 행정적 이관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합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으며, 특히 '5세 이전(Before Five)'이라는 유아기 교육·보육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두 영역간 차이를 없애고 영유아를 위한 온전한 하나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1. 보육에 대한 지원의 요구

보다 앞서 1970년대 뉴질랜드에는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킨 사회 여성 단체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전까지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있던 보육을 지원 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은 보육을 위한 지원은 단지 저소득층의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자유(해방)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종일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와 엄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외침에 여성들이 동조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해방과 보육을 연결짓는 것은 사회적 저항과 부딪혔으며 여성 운동과 보육에 대한 반발을 높였다. 이에, 시대 분위기를 반영

하여 보육이 유아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주장에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70년대 이전까지 뉴질랜드에서 보육은 냉대 받는 상황에 있었고 보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어떤 경우에도 영유아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일하러 밖에 나가야 하는 가족의 '골치 아픈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보육'이라고 생각하였고, 정부는 오히려 유치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원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보육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보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 발생하는 여러 저항요소 때문이었다. 첫째, 보육은 여성을 일터로 나가도록 허용하는 종일 서비스로 인식되었으므로, 종일 보육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둘째, 돈을 버는 여성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고, 보육은 이들 취업모들에게 취사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개인적 소비재' 처럼 보였다. 셋째,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다 보육료 전액을 지불한 능력이 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1974년에 도입되었고, 1980년 초반에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 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가 편성되면서 보육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육에 대한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은 1989년에야 도

달릴 수 있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질 높은 보육이 영유아에게 이롭고, 유아를 위한 교육의 적절한 한 형태이며, 가족을 위한 지원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동전의 양면으로서 교육과 보육을 보았고, 이들 논쟁은 1980년대 중반의 정치적 변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즉 뉴질랜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하여, 보육을 영유아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서 지원의 타당성을 이끌어 내었고 결과적으로 영유아기에 있어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ECCE: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영유아기 교육(ECE: Early Childhood Education)’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2. 통합의 역사적 배경

가. 1970년대: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1971년 출범한 ‘학령전교육 조사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into Pre-School Education)’는 영유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대신 취업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놀이센터, 영리사업체를 수적으로 늘렸다.

1972년, 보육, 유치원, 놀이센터 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육은

사회복지부로 옮겨졌다. 이는 행정구조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회안전부가 사회복지부로 변경되면서 교육부 아래 아동복지국 관할이었던 보육시설 관리 업무가 아동복지국과 함께 사회복지부로 옮겨지게 된 결과이다. 이 때 보육이 복지서비스의 일부로 정부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부로의 이동이 지지되기도 하였으나 보육은 보호 이상의 일이므로 사회복지부 소속이 불합리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많은 지역사회의 사회운동가들은 여성의 자유,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인정, 그리고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1970년대는 보육이 ‘운이 나쁘게’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에서 모든 시간 엄마였던 여성을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해주는 서비스로 인식이 변화된 시기였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점차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보육의 질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점차 바뀌었다. 즉 여성들은 보육과 교육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들의 희망은 보육의 질을 높여서 영유아들이 충분한 교육적 혜택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련된 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 동조의 움직임은 충분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에 변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초점은 보육을 위한 행정적 구조에 있었다. 1976년 3월, 국무총리가 사회 경제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다음

과 같은 권고를 통과시켰다.

1. 보육과 교육에는 동일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2.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과 놀이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부가 진행해 간다. 특히 종사자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의 교육적 기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3. 주 장관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을 고안한다.

나. 1980년대 초: 마오리족(원주민) 영유아 서비스의 개혁

1982년, 마오리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1981년 마오리족의 부족 회의에서 발의된 마오리 원주민 보육서비스(코항가리오 nga kohanga reo)의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은 마오리족을 강화하여 권력을 부여하고, 마오리 언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비록 마오리족 관할 부처의 코항가리오에 대한 지원은 적었지만, 마오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 다수의 코항가리오가 설립되었다. 일반 보육시설 규정과 보육 정책이 코항가리오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 1980년대 중반: 노동당 정부의 출범과 보육에 대한 지원의 증대

1984년 말, 뉴질랜드에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었다. 영유아 관련 이슈가 그들의 정치적 협의

사항에서 주요 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여성과 교육을 위한 정당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다. 양질의 ECCE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약을 했다.

- 동일한 재정 지원: 학교 체제와 연속선 상에 있는 교육 분야인 유치원, 놀이센터, 보육간 균형 추구
- 영유아보육 행정의 교육부 이관: 영유아들에서 교육과 보육은 분리될 수 없고, 교육의 강화가 더 나은 성과를 산출한다는 신념
- 유아 교사 관련 연구의 확충

3. 기본 방향: 질적 수준 제고

뉴질랜드 정부 「사회 평등 위원회」는 1988년 1월 '보육과 유아교육 사업단((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orking Group)' 을 출범시키면서 교육부, 사회복지부, 건강부의 공무원, 여성부, 재무부, 주 서비스 위원회, 마오리와 태평양도서 공동체 대표, 대학교수들을 포함했다. 이 사업단의 기본 명제는 "평등"의 문제로, 영유아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의 업무는 ECCE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성의 제고, 재정과 기금조성 과정에 대한 효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권고를 제안하였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모든 ECS(Early Childhood Service)에 대한 정부 역할의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 영유아를 위한 측면 - 양질의 서비스는 영유아의 요구와 권리를 만족시킨다.
- 인력을 위한 측면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 다음 세대로의 문화 전달 및 지속의 측면 - 영유아들이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학습 기회를 모든 부모들에게 부여한다.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의 여러 국가적 성명들은 서비스의 종류보다는 ECCE의 질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서비스의 유형을 넘어서는 질 제고가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을 가능케 한다고 여겼다. 유아들은 질 좋은 ECCE의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서비스의 질과 교사교육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ECE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가 있는 시설들이 더 좋은 질의 보육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성과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는 3년으로 유치원 교사 양성교육 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유치원 교사들은 2년간의 교육을 받았고, 보육교사는 1년 교육을 받고 있었다.

보육과 교육의 통합의 과정에서 유치원교사 양성과 보육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기간이 다를 수 없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공동 교사교육 논의는 양성교육 기간의 동일함에만 그치지 않고 양성 과정의 통합을 추진하여, 결국 보육교사 양성을 유치원교사 양성 체제와 통합시켰다. 즉, 수준 높은 교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간을 장기화할 뿐 아니라 보육종사자들이 보다 심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다른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것과 같이 가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점차 노력하게 되었다.

4. 통합의 행정적 과정

1984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육아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조치는 보육시설 관련 개정 규정을 보급하여 각 보육시설로 하여금 장학감독을 받게 하고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중요한 조치는 교육장관이 소집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공개토론회의 개최였고, 세 번째 조치는 체제관련으로, 정부 특별 전담 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부서별)책임의 재할당’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조치는 1988년부터 제 3의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 연수와 유치원교사 연수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관련된 다섯 번째 조치는 1988년과 1989년에 이루어진 넓은 범위의 교육개혁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적 의무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소집하여 합동 장급 위원회를 마련하였다. 1985년 12월 교육부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열린 보육과 교육에 관한 공개토론포고서에 의하면, 두 장관은 행정서비스의 이전에 관해 1986년 7월까지

지 이전 및 변경 법안을 공시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의 정부예산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공개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달체계, 재정보조, 교원연수, 자문 및 지원, 관리, 지역 사회의 요구 등에 대한 권고를 합의하기 위해 그룹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그룹 토론 보고서는 1986년 정책개발에 활용되었다. 정부 사회복지부에서 교육 부로의 보육 서비스 이전 시 인력확충과 운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부에는 보육시설을 허가,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자리가 새로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는 책임 관리자들 사이에 서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다.

다음해 초, 정부는 선거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지단체를 확보하고, 시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장애아복지단체를 사회복지부 최고경영기구에 임명하는 등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위원회는 교육부로의 이전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 교육부 관할하에서 모든 보육과 교육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전적으로 사회복지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동의는 얻어낼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의 보육 공무원들, 보육 관련 서류, 재정보조의 이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는 공명정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우선 사안이었고,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조와 교사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교사 양성문제는 1985년 5월에 ECCE 분야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일주일

에 걸쳐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5년간에 걸쳐 최종 결론이 나왔다. 합의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보육과 유치원 교사교육 연한 통일
- 교원양성 방법에서부터 필요한 교원자격까지의 교원행정 통합
- 연수과정에 대한 핵심 교과 과정 통합
- 다양한 교사 연수를 위한 재정보조의 형평성
-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한 급여의 형평성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개토론은 교원 양성과정의 확장과 통합 사안에서 큰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이 정책은 교사의 지위와 ECCE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교원 교육과 자격은 일반교사의 교육 및 자격과는 비교할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데 동의하고 1986년 유치원교사의 동등한 보수 보장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었으며 교육부장관에 의해 실행되었다. 교육부장관은 관련종사자들에게 유치원 교사에 해당하는 3년 교육프로그램과, 보육종사자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통합연수까지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부 내각은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지지하였으며,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을 3년으로 통합하도록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도 일부 관련자들은 재정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에서 유아교사 자격요건 제고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다.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뉴질랜드 정부내각은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고 그 개혁의 일부로, 정부 내각 「사회평등위원회(the

Cabinet Social Equity Committee) 내에 보육, 유아교육 관련 특별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9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모든 재정조가 자금지원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보육에 투입되었다. 교육부 산하 모든 서비스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별도의 지원까지 포함, 자녀 및 시간 당 보조금까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행정적 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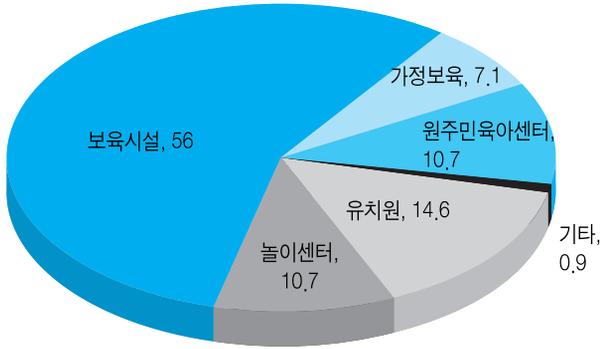
- 1984 노동당 정책 선언서 완료
- 1984 보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 1985 보육시설에 관한 개정안 통과
- 1985 보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연수 쟁점화
- 1985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행정의 전환을 위한 합동 장관급 특별 전담반 설치
- 1985 보육 및 유아교육에 관한 장관급 공개토론 의회에서 개최
- 1986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보육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 1986 유치원교사 3년 양성과정 특별 전담반 설치
- 1986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선을 위한 특별 전담반 설치
- 1987 「신정책」: 보육 및 유치원 교사 3년 양성교육 정책 수립, 시행
- 1988 「더 나아가는 교육정책」: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특별전담반 설치 및 연구
- 1988 「5세 이전(Before Five)」: 보육과 유아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 발표

- 1988 Te Kohanga Reo(원주민 육아지원센터) 정부 차원 검토
- 1989 「5세 이전(Before Five)」정책실행 위원회의 연구
- 1990 Te Kohanga Reo 연구를 포함한 모든 ECS에 대한 공익 재정투자계획 수립
- 1990 보육과 유치원 공통 교사 자격요건에 관한 단계별 정책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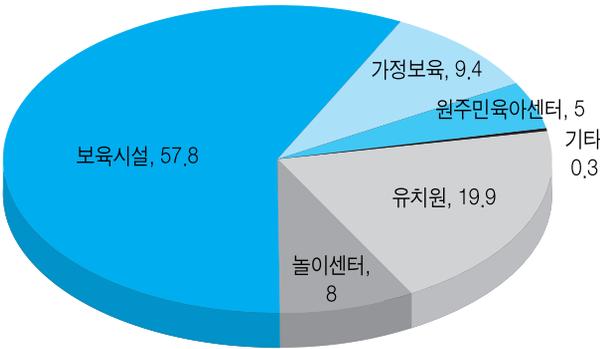
5. 결론

현재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육아 지원서비스에는 유치원, 놀이센터, 보육시설(education and care), 가정보육서비스(home-based services), 통신학교(the correspondence school), 원주민 육아센터(코항가 레오, kohanga reo) 등 모든 교육·보육 서비스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발적 참여와 기금으로써 비정부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 지원 시설은 별도로 있고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은 거의 주(州) 법령(1988)에 적용을 받아 정부가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협상하는 공립 기관이다. 즉 정부는 ECS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만 서비스 기관 자체를 운영하지는 않고, 위원회, 이사회, 소유자 단체 등이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기관 유형과 수적 현황

2) <http://www.deewr.gov.au/Pages/default.aspx>



[그림 1] 뉴질랜드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시설 수 비율(%)



[그림 2] 뉴질랜드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 영유아 수 비율(%)

은 다음과 같다(그림 1, 2 참조).

- 가정보육시설: 영유아 교사 자격이 있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서 가정시설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를 채용한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보육시설: 0~4세 및 소수의 5세¹⁾가 이용하고 있는 ECE기관으로, 민간 서비스나 비영리 지역사회 설립 등 소유자 및 관리자가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상업적이고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도 하며, 몬테소리과 같은

특수한 특성을 지닌 협회와 제휴하기도 한다. 회기로 운영하는 곳, 종일 운영하는 곳, 시간제로 이용하는 곳 등이 있다.

- 유치원: 3~4세 유아들을 위한 기관으로, 주로 회기를 두고 운영한다.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자이고 지역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반일반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97%) 유아가 주 20시간 이하 이용을 함으로써 전액 지원을 받고 있다.
- 놀이센터: 부모협동, 회기별 운영,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등록 영유아의 부모들이며, 지역 협회의 관리를 받는다.
- 통신학교 영유아 서비스: 주립 통신학교가 제공하는 원거리 유아 교육 서비스이다. 통신학교는 장거리, 질병, 장애, 특별한 환경 등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등교할 수 없는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장거리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마오리 원주민 센터: 마오리족 원로들이 관할하고 마오리족 언어로 운영하는 언어로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보육 센터로,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영유아들의 부모나 부족 원로들이다.
- 태평양 도서지역 이민자 영유아 센터: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위해 일부 시간이라도 태평양 언어로 운영하는 센터로, 교사와 관리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다.

1) 뉴질랜드는 5세가 취학연령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1980년대 중반 교육부 관할 업무로 통합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수 년 간에 걸쳐 교사 양성 및 처우개선, 교육과정 통합, 재정지원의 통합 등 각 부문별로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 현재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보지 않고 ‘영유아기 교육(ECE)’으로 동의하여 교육부가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보육, 놀이센터 등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모든 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특성은 교육부 관할로 영유아기 육아서비스가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각각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럼에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동일

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자격의 교사, 동일한 영유아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던 뉴질랜드의 보육이 유아교육과 동일한 질적 수준으로 올라감으로써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또한 ‘국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게 한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행정상으로는 교육부 중심의 통합이고, 내용상으로는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사인력의 통합이며, 기능적으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목적상의 장점을 그대로 둔, 이원화를 인정한 통합이라 하겠다.